

반환점 돈 MB정부 전반기 공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진보 정권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신보수 정권 2.5년은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MB 정권은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복지, 교육, 대북문제 등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 능력 OECD국 1위

■ 경제회복 발판 마련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면했으나 비상정부를 선포하는 등 대규모 재정집행과 금융지원 강화 등 신속한 정책 결단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호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28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통해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피해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달성

했으며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빠른 위기극복에도 고용 위기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후반기 정책 기조를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잡고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정책 지지부진... 더 힘들어진 서민

■ 평가 엇갈린 교육·복지

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내걸고 교육개혁에 나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와 교원평가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교육계를 경정 만들 수 있는 화력 지상주의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특히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서는 교사집단의 저항도 심해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어떻게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기 초 내세웠던 개혁정책 가운데 아직 지지부진한 것들도 많다. 대학입시 자율화를 포함한 3단계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상당수이고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친서민의 기조 속에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온기가 서민들의 피부에 닿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무너진 화해협력... 천안함 사태로 최악

■ 대북관계 개선 요인

대북 관계는 정부 출범부터 순탄치 않았다. '비핵·개방·3000', 그랜드비전, 한반도 신평화구상 등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까지 벌였지만 천안함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남조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동안 일궈온 화해협력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통부족·밀어붙이기... 보험 갈등 심화

■ 일방통행 국정운영

역대 최대라는 530만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독특한 대가를 치렀다. 취임 초기 소고기 협상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결국, 류우의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기 청와대 참모진이 넉 달 만에 중도 하차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거둬야 할 해악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등으로 보수와 혁신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사회통합은 요원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 또한, 소통부족과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좌절,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남북관계의 갈등 증폭 등 쉽지 않은 내외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집권 반환점을 도는 25일부터 2012년 4월 19대 총선 전까지는 대규모 선거가 없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이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권재창출 함께 노력하자”

李대통령 - 박근혜 비공개 오찬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1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정권재창출에 대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전날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 35분동안 청와대 백악실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이며,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가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와 귀국보고를 한 이후 11개월만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회동 직후 참모들에게 “박근혜 전 대표가 (회동 내용을) 적절할 때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여권 내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이날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대변인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 금요일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고, 토요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오찬을 함께 했다”며 “두 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문제를 포함한 국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잘 얻어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지금까지의 불편한 관계를 털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반환점(8월25일)을 며칠 앞두고 회동이 이뤄진 점은 집권 전반기 불편했던 관계를 후반기에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두 털고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천안함 사태이후 급랭한 남북관계를 풀고자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대북 특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박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정 수석을 통해 전달했고, 이를 박 전 대표가 받아들임으로써 다음달 본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무줄 판결’ 없애고 보호감호제 재도입

형법 개정안 시안 25일 공청회

50년 만에 전면 손질되는 형법의 개정안 시안이 3년간의 논의 끝에 일반에 공개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판사의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시안을 확정해 25일 공청회에서 공개 논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안에는 판사가 작량감경할 수 있는 요건을 ▲초범일 때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 ▲법형을 자백했을 때 ▲상습범이

라도 죄질이 가벼울 때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 제공을 했을 때 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형법은 작량감경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법원의 ‘고무줄 판결’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안이 개정 형법에 반영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멋대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안에는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되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후·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청회에 이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확정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바이블칼리지 8월 학기 신(편)입생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llege, admission requireme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dmissions office.